빈부격차의 완화 및 기초생활보장의 강화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참여정부 보건복지정책 개괄적 평가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보건복지정책분야에서 철학적으로 맥을 같이 하며, 정책적으로는 계승 ·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철학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함은 복지분야의 국가개입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방향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참여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보건분야에서 공공의료의 확대, 복지분야에서 차상위계층까지 기초보장의 확대추진 등이 이러한 국가개입확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정책적으로 계승 ·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인 큰 틀의 변화를 추진하지 않고 기존 정책의 대강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보건복지분야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추진을 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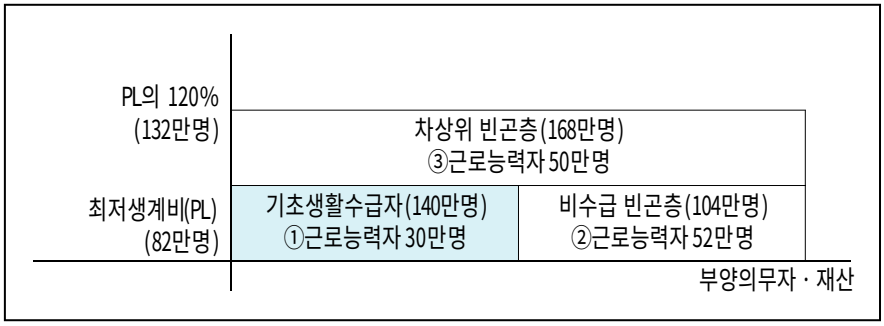
기초보장분야에 한정하여 본다면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을 내실화 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밀집된 근로빈곤층을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주목하여 근로빈곤해소에 정책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자활사업강조, EITC 도입 모색 등이 근로빈곤대책을 중시하는 단면이다.

2. 근로빈곤관련 도표

◇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란

☞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일하더라도 빈곤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계층

<한국사회 근로빈곤층 규모>



자료출처: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2004),『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3. 향후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1) 양극화 극복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우선과제는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 혹은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재정비하는 작업이다. 노인 · 아동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물론 확산되고 있는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급요건으로서 가구소득수준과 인구학적인 요소를 결합한 노령수당, 장애인수당 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노력이 있어야 한다.

근로빈곤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초보장제도의 내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실시 이후 이제 4년여가 지났다.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내실화의 첫째 과제는 비수급빈곤층으로 남아 있는 사각지대의 해소이다.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사적이전에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실과 부합되게 부양의무자 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대부분의 사각지대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실화의 두 번째 과제는 현재 생계 · 의료 · 교육 · 주거 등 모든 급여가 통합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별 급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이미 통합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개별급여화 하더라도 기존 급여는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 잘한 점

복지수요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도입이나 제도개선이 여러 중앙부처에 연관되어 있어 추진이 미뤄지던 일들을 위원회가 관련 부처를 통할하여 추진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서 참여정부에서 설치된 위원회들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려는 경우 정책집행의 책임을 가진 각 부처와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업무범위설정에 유의를 요한다.